
정책참고자료

2017-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대형·복합 특수재난 분야, 2017년 전문교육 시행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강원 동해시 주민의 고충 청취 간담회 열어	8
--------------------------------	---

3 기획재정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10
------------------	----

4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권역별 가선평결과’ 발표	33
--	----

5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창업 중심으로 대학이 변화한다	36
--------------------	----

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예술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다	40
---	----

2017년도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 선정	42
------------------------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	45
----------------------	----

8 환경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 융합 표토환경관리 전략 세운다 ————— 48

9 고용노동부

이제는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로 주문해 주세요! ————— 42

10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진로직업 일일체험으로 꿈을 키워요!” ————— 55

11 국토교통부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 58

12 해양수산부

미래 수산신기술 여기 모여라 ————— 60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 ————— 64

대형·복합 특수재난 분야, 2017년 전문교육 시행

산업도시 울산부터 순회교육 시작, 온라인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어...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재난 분야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수재난은 대형·복합·신종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종사자들조차 이에 대한 개념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기관 간 협업대응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 따라서 이번 교육은 이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실시할 예정이다.

◆ 특수재난이란?

대형교통사고(철도·지하철·도로·항공기·해양선박 등), 환경오염사고(유해화학물질 등), 감염병, 가축전염병, 원자력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대형사고, 에너지사고(전력·가스 등), 정보통신사고(사이버공격 제외) 등을 포함한 신종·복합·미래재난 및 다부처와 민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재난

- 우선 첫째로, 지난해 개발한 사이버교육 콘텐츠「특수재난 길라잡이」를 연말까지 총 20회 이상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정부 및 지자체 교육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PC·모바일 동시학습이 가능하다.
 - 특히,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간접체험과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e-Book 등은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특수재난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이는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로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과 각 지자체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는 10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이슈를 사전에 파악한 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현장사례와 대책을 공유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 첫 순회교육은 3월 31일 울산에서 ‘위험물질 누출사고 등 국가 산업단지 대형사고’를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공무원, 공공·민간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셋째, 특수재난분야 전문교육과정인 「특수재난 관리과정」을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연 2회(5월, 11월) 개설하여 각각 3일 과정으로 운영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특수재난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윤여송 특수재난기획담당관은 “앞으로 각 부처 교육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재난 분야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특수재난 권역별 현장순회교육 일정

월별	지역	주요 교육내용	교육대상
3월	울산	산업단지 위험물질 누출사고 등	지자체, 공공·민간
4월	경남	산업단지 폭발사고 등	지자체, 공공·민간
5월	대구	유해화학물질	지자체, 소방, 공사·공단
6월	서울	대형교통사고(지하철, 철도)	지자체, 공공·민간
7월	충남	전력재난 및 화학사고	발전회사, 협력업체
8월	인천	공항안전(감염병, 정보통신)	공항 종사자
9월	경남	해양선박사고(충돌, 전복)	지자체, 공공·민간
10월	경기	대형교통사고(지하철, 철도)	지자체, 공공·민간
11월	강원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지자체 공무원
12월	부산	에너지 안전	지자체, 발전회사

☐ 특수재난 사이버교육과정 「특수재난 길라잡이」 개설

- 교육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전국 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과정 공동 활용
- 운영시기 : '17년 2월~12월, 총 21기 운영 (2월 시범운영, 매월2기·12월1기)
- 교육대상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 구성내용 : 총 16차시 (특수재난 개념, 특수재난 유형별 사례 및 대응요령 등)

☐ 특수재난분야 집합전문교육 「특수재난 관리과정」 운영

- 교육기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천안 소재)
- 운영시기 : '17년 5월, 11월 (3일 비합숙 과정)
- 교육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 교육내용 : 특수재난 개념이해 및 정책, 특수재난 유형별 대응방안 등

□ 추진 배경

-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해당 지역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제공
- 국가산업단지 밀집지 울산권역(울산·미포·온산)을 대상으로 시행

□ 교육 개요

- 교육주제 : 산업단지 대형사고 예방 분야
- 일 시 : '17. 3. 31. (금) 10:00~17:30
- 장 소 :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울산광역시 소재)
- 교육대상 : 울산지역 공무원, 산업단지 공공·민간 종사자 (약 145명)
- 교육내용 : 특수재난 정책방향, 울산산업단지 안전관리, 위험물질 누출사고예방, 지진 등에 의한 환경영향 및 위기관리, 국내·외 테러리즘과 대책 등 (* e-러닝 콘텐츠 상영 포함)

□ 진행 순서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10:00~10:40	40'	▪ (강의1) 특수재난 정책 및 미래재난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10:40~11:00	20'	▪ 특수재난 e-러닝 콘텐츠 상영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11:00~12:00	60'	▪ (강의2) 울산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안전보건공단
12:00~13:00	60'	▪ 중 식	
13:00~14:30	90'	▪ (강의3) 지진 등 위기관리 대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4:30~15:30	60'	▪ (강의4) 국내·외 테러리즘 및 대책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15:30~17:00	90'	▪ (강의5) 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관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17:00~17:30	30'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강원 동해시 주민의 고충 청취 간담회 열어

30일 오후 동해시청에서...주민대표와 관계기관 참석

- 강원 동해시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참석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장과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요구해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동해항 전용 진입도로 건설, 덤프트럭 주기장(駐機場)* 개설, 동해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다양한 고충을 해소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해 왔다.

* 비행기나 중기(重機) 따위를 세워두는 곳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 국토교통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시청, 동해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함에 따라 주민과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간담회를 주재하는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열리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동해시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현장에서 듣고 관계기관들과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 ☐ 정부는 3.22(수) '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2017. 3. 22.

관계부처 합동

I. 청년고용 현황

◇ 청년 고용률 상승세 속에 실업률 동반 상승

□ 전체 고용시장은 고용률이 상승세이나 내수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부진 우려가 상존

○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구조가 악화될 우려

* 제조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16.11)△10.2 (12)△11.5 ('17.1)△16.0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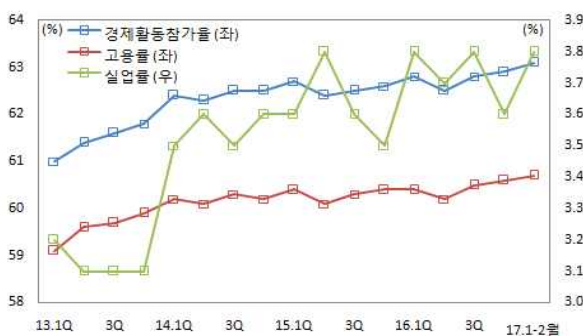
* 자영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16.11) 14.1 (12) 15.5 ('17.1) 16.9 (2) 21.3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16.11) 31.1 (12) 34.5 ('17.1) 32.3 (2)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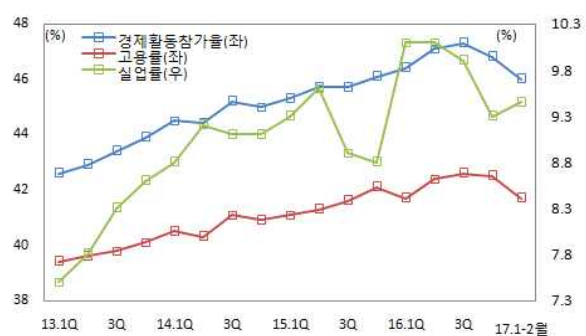
□ 청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해 왔으나, 금년들어 하락세로 반전

○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동반 상승

전체(15세 이상, 계절조정) 고용지표



청년(15~29세, 계절조정)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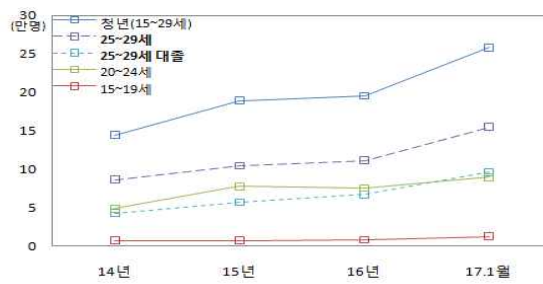


○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인해 인적자본 훼손과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

청년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월이상)



청년 구직단념자



◇ 불법적 근로, 일·학업 병행 곤란 등 청년 고용여건 취약

□ 더욱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여건에 직면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열정페이 강요 등 불법적인 근로환경에 노출

- * 청년 체불임금 신고자수(만명) : ('13) 4.8 ('14) 5.2 ('15) 6.1 ('16) 6.7
청년 체불임금 신고액(억원) : 1,066 1,142 1,216 1,406
- * 최저임금 미만율(% '16년): (10대) 57.6 (20대) 13.4<(20~24세) 23.8> (30대) 5.3 (40대) 7.6

○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일과 학업의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

- *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하는 현실
- * 10~20대 저신용자(7~10등급, '16.9월, NICE 신용평가) : 535,468명

○ 창업을 통해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고자 해도, 정보 및 자금부족, 실패시 재기불능 가능성 등에 직면

- * 창업자 연령 분포(% '15년, 중기청) : (20대) 1.0 (30대) 13.0 (40대) 33.2 (50대) 34.6
- * 청년들은 창업의 애로요인으로 자금조달 등 실패의 두려움(38.0%), 인프라 부족(24.3%), 체계적 교육 부재(17.7%) 등 응답('15년 대한상의, 20~30대 300명 설문)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 전망

□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위축 등에 따른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당분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속 전망

- * 소매판매(전월비, %) : ('16.10) 4.2 (11) △0.3 (12) △0.5 ('17.1) △2.2

○ 또한, 불충분한 고용기회로 실업이 장기화되고 구직활동이 위축되는 등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고용의 질 제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차게 생애를 설계하고 개척하도록 지원

Ⅱ. 청년고용대책 점검결과 및 평가

1 그동안 대책의 성과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 [지원인원] '15~'16년 목표 13.5만명 대비 15만명 지원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여 공무원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간호·간병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약 4.9만명 신규채용

○ (일자리 나누기) 대체인력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를 지속 추진

○ (교원)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이 감소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부진한 측면

⇒ 재정(지방교부금) 여건 개선을 통해 명예퇴직 수용률을 제고(83→100%)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홍보 및 절차 간소화로 확대 추진

□ (민관협업) 현장기반의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약 7만명 취업지원

○ (고용디딤돌) 공공기관·대기업에서 직무교육을 받아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참여자 훈련수당 비과세,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용디딤돌 운영실적 반영 등
→ '16년 총 41개사(공공기관 22개사, 대기업 19개사) 참여, 7,654명 지원

○ (상생고용지원*) 시행 초기에 인지도가 부족하고, 기업 채용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참여요건을 엄격히 운용하여 실적이 부진

* 임금피크제 등 도입+청년 신규채용=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 등 연 540만원) 2년간 지원

⇒ 참여요건을 현실화*하여 '16년 하반기부터 청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중

* 임금피크 대비 감액을 10→5%, 인턴→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포함('16.7월~)

- (취업연계) 채용행사,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중개인' 역할 강화로 3.1만명 취업연계
 - (분야별 채용행사) '16.4~12월중 총 94회의 채용행사를 통해 5,400여명을 채용('17년 목표 1.2만명)
 - (사회맞춤형 학과) 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채용으로 연계되도록 기업발굴·매칭 및 재정지원
 - (일자리 포털) 공공 고용정보(워크넷, HRD-Net, 고용보험, 월드잡 등)와 민간 고용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 중(~'17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확충 및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16.7월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인지도 부족으로 목표 미달
- * 2년 근속시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 (정부 600 + 기업 300 + 개인 300만원)
- ⇒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정착 유도
- * 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50%), 중소기업 손금인정 및 R&D 세액공제(25%)

2 평가

◇ 많은 과제들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

- 청년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수요 확대가 중요
 - 한편, 기존 대책은 취업지원 및 고용인프라 구축, 대학 재학생 등에 중점을 두어 부분적으로 접근한 측면
- 경기회복,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 채용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으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 더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

참고 1

대책별·과제별 점검결과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월)) 약 11.9만명의 일자리 기회 창출

구 분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명)					
	'15년		'16년		'15·'16년 목표 계	실적 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신규채용	12,000	17,801	30,000	40,062	42,000	57,863
▶ 공공부문 소계	2,000	16,070	18,000	32,681	20,000	48,751
교원명예퇴직 확대	-	-	7,500	5,397	7,500	5,39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300	1,265	3,000	4,101	3,300	5,366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	-	4,000	4,282	4,000	4,282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1,700	1,659	1,300	1,615 ^①	3,000	3,274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	-	200	71	200	71
방과후학교	-	-	2,000	2,800	2,000	2,800
특수교사	-	-	-	606	-	606
유치원 교사	-	-	-	429	-	429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	13,146	-	13,380	-	26,526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0,000	1,731	10,000	5,321	20,000	7,052
▶ 해외취업	-	-	2,000	2,060	2,000	2,060
청년인턴(강소·중견기업 등)	15,000	3,229	30,000	28,374	45,000	31,603
일학습병행제	2,000	5,062	8,000	24,455	10,000	29,517
계	29,000	26,092	68,000	92,891	97,000	118,983

* ① 채용 진행 중인 지방직 공무원(1,109명) 포함

※ '15년 대책 목표 설정시 고용디딤돌('16년 목표 1만명)이 포함되었으나,
'16년 대책에 취업연계로 포함되어 '15년 대책 목표·실적항목에서 제외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약 3.1만명의 취업지원

구 분	세 부 과 제	일자리 기회 창출(명)	
		목 표	실 적
취업연계	고용존 채용연계(청년 채용의 날 등)	2,500	2,611
	분야별 채용행사	5,000	5,400
	고용디딤돌	9,400	7,654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2,000	2,106
	대체인력 활성화	5,000	4,487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10,000	6,591
	경력단절여성 복귀수요 창출	4,200	2,619
	계	38,100	31,468

* ① '17.2월 졸업 이후 구체적인 실적 확인 가능('17.6월 조사 예정)

② 제도개선 진행중, '16.10월 실적

③ 대부분 학생들이 여름방학기간에 참여하는 사업이나 '16.7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부진
→ 홍보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17년 목표 5천명 중 '17.3월에 약 4천명 신청

Ⅲ. 기본방향

◇ 청년고용대책을 내실화하여 청년들의 기본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

□ 금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

- ①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도피하지 않도록 고용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
- ②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 채용관행을 근절
- ③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 강화

□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 ① 경제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②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 ③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충원을 지속 추진



IV. 보완방안

1 취업취약청년 지원

[1]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 수요가 많은 고용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지원

*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학교 밖 청소년,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

□ (고용지원서비스)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

○ (사회맞춤형학과*)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우선 선발을 권고

* 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채용 연계되도록 지원('17년 1.5만명)

○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을 30%(3,000명) 우선선발

* 기업·민간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등 제공('17년 1만명)

○ (해외취업지원) K-Move 스쿨^①, 민간알선지원^②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 우선 선발

① 해외취업 희망청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취업 연계('17년 총 3,500명)

② 민간 해외취업 알선업체의 수수료 지원(1인당 200~300만원, '17년 총 600명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취업취약청년별 고용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

① (실업의 장기화 방지)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자 DB를 활용하여 장기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

- (구직단념 예방) 취업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확대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17년 총 8회 상담 프로그램 중 2회 이상 필수 참여하도록 개선)
집단상담프로그램(구직의욕 고취 등, '16년 실적 5,327건→'17년 목표 5,640건)

②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를 시범운영(‘17년 2개 대학)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16년 4개소 → ‘17년 8개소)

③ (군복무 경력단절 방지)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고졸 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 완화

* (현행) (예비)벤처, 창업경진대회 입상(3위 이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 연기 허용
→ (개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①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②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본선 이상), ③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④ 벤처캐피탈 등 투자받은 실적 있는 경우를 추가

- (취업맞춤특기병제 개선) 군복무를 하며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과정을 다양화

④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02개소)」에서 전문직업훈련(취업사관학교, 9개 훈련) 및 기업가정신 교육(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 등을 연계·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

⑤ (여성 고용지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17년 증액예산(59개교, 대학당 평균 1억원)의 30% 이상을 여성에 특화지원하고, 여성 고용 취약성 분석을 통한 여성 맞춤 지원에 대해 컨설팅·모니터링 제공

- (역량강화) 여성인재 아카데미(경력개발, 목표설계, 여성리더 역할모델 제시 등) 교육 확대(‘17년 목표 150명 → 300명,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직접일자리) ‘17년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중 청년적합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각 취업취약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현장연수(총 190명)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을 30% 우선 선발

○ (공공 일자리)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일자리(총 16,350명)에 청년 장애인 30% 우선 지원

○ (항공 전문인력 양성)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총 60명) 목표를 25%로 설정

[2] 신용유의자로의 전략 방지

- **(채무불이행* 사전방지)**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하향조정(1/2)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10% 수준) 설정

*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 금융채무 불이행자

** (예) 최초 약정이자율 30% → (이자율 1/2 조정) → 15%로 여전히 이자부담이 과중

- **(학자금 대출지원)** 민간장학재단(대출이자 지원)과 한국장학재단(수혜자 정보 제공 등) 협업을 통한 이자지원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마련

- **(학비부담 경감)** 등록 후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최소화 추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 **(생계자금 지원)**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지원***

* **(대상)**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청년가장, 1인 가구청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통한 심사 선정(최대 5,000명)

(지원) 1인당 최대 3백만원(청년희망재단)

-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확대(800→1,200만원)하고 거치기간(4→6년) 및 상환기간(5→7년) 연장**

* **(신용회복위 보증) (대상)** 대학생·청년 중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6~10등급 / **(내용)** 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 (연 5.5%)

* **(미소금융) (대상)** 대학(원)생·청년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 **(내용)** 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 (연 4.5%)

- **(성실상환 유인제공)**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에 대해 취업 알선 지원

*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비 지원한도 확대(500만원→1천만원)**

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1) 기초고용질서 확립

- **(인식개선 및 단속강화)**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근로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 **(교육 및 사업주 인식개선)**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활동 확대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의 보호에 대한 사업주 인식 개선*
 - * 아르바이트 수첩(근로계약, 사업주 준수사항 등) 배포 확대('17년 11만개소)
 -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체결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함께 공동캠페인 추진
 - * 취업포털의 공고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서명 후 온라인으로 교부하는 체계('16.8월 가이드라인 마련)
 - **(근로감독 강화)**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7년 8천개소)
 - 특히,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 실시**
 - * 인터넷 상담, 근로권익센터(청소년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제보) 등 연계
 - **(처벌의 실효성 제고)** 기초고용질서 미준수시 실질적 불이익 강화
 - (서면근로계약 정착) 미작성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 추진
 - *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
 - (임금체불 근절)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퇴직자→재직자 포함) 추진
 - (최저임금 준수) 미준수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 추진
 - * **(현행)**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 **(일경험수련생 보호)**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 순수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지도감독 강화*

* 워크넷 등 공공/민간 청년취업포털에 표준협약서 등재

- 근로와 학습(일경험수련)이 혼재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률 적용 명확화* 추진

* (예) ①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으로 보호
②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지원법」 제정으로 보호

- **(위반업체 퇴출유도)**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명단 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사회적 제재 부과

- (명단공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 추진

* (현행) 3년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1년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시 공표
→ (개선(안)) '17년 상반기 중 명단공표 요건 완화방안 마련

- (정부입찰 불이익)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방안 마련('17.上)

[2] 불공정 채용 방지

- **(불공정 채용 제재)** 부당한 청탁·강요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중

- **(투명한 채용절차)** 이력서에 출신학교·나이 등 직무능력·경력 등과 상관없는 사항 확인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 부모직업·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시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제작 및 현장의 자율적 실천 유도

3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1] 중소기업 근속 유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

○ 임금총액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임금구조를 고려하여 기업 참여요건을 현실화*하고 생산직과 고졸이하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독려

* **(현행)**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 → **(개선)**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추가 3년)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성과보상기금 규정 개정 후 세법개정안 제출('17.8월)

○ 기업 기여금을 기업이 자발적·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추가적인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

* **(현행)** 기업기여금 300만원 고정 → **(개선)** 300만원 이상 적립 가능

□ **(근로여건 개선)**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 **(교통·주거 편의)** 대중교통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접근성 제고

* '16년 18개 산업단지에 100억 지원 → '17년 150억 지원

○ **(문화생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를 확대(30→36개)

-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지원) 중소기업에 일정기간(예: 2년 이상) 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 (예)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0.2%p 인하

[2] 채용연계 서비스 강화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중심채용) 직무별 채용기준, 기출문제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NCS 제도개선·보완 추진**

* 「능력중심채용 홈페이지(onspec.ncs.go.kr)」 활용(현재 인사담당자 인터뷰 등 제공 중)

** 취업준비생·청년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를 지방공기업까지 확산

-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하는 공공기관('17년 332개)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 어학요건 등 추가적인 스펙요구를 최소화

- (워크넷) 취업애로계층^①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마련하고 취업 검색조건 세분화^②, 모바일 서비스 강화^③로 이용 편의성 제고

① 고졸 취업자,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② 성·연령·우대조건·복지 등,

③ 워크넷앱 개선, 이용자 주변 취업정보 알림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등

- (사회맞춤형학과) 산업체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내 실습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실습 인프라 구축 지원

* '17년 총 64개교, 약 980억원 지원 예정

(일반대: 20개교 학교당 약 11억원 / 전문대: 44개교 학교당 약 17.3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양성·배치하여 화상 채팅 등으로 전국에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담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강화

- (해외취업) 국내 복귀 후 해외 취업경력을 살려 국내취업을 원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DB를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창업 활성화

[1]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준비기) 창업성공패키지 등 교육시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

○ (지방 창업지원) 창업교육 인프라가 적은 지방에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제공 확대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편)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배포하여 대학생들의 창업도전이 원활하도록 지원

* (예) 창업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창업휴학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창업휴학 요건을 개선하여 대학생 창업도전을 지원

□ (창업기) 창업자의 진출 수요가 높은 해외 3개 지역(미국 뉴욕, 중국 상해, 영국 런던)에 열린공간, 창업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를 시범 운영('17년)

○ (청년-시니어 매칭) 청년의 아이디어와 시니어 전문가가 보유한 기술력·자본·경험을 매칭하여 협업과 공동창업을 유도하는 매칭데이 운영('17.下)

□ (성장기)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공공입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을 완화*

* 우대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창업 5년 이내→7년 이내)

○ (자금조달) '17년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 추가 조성

* (운용현황) 31개, 5,557억원 규모('17.1월말 기준)

○ (전자상거래 창업 지원) 대부분 5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

[2] 창업 실패자 지원

☐ (재도전 환경 조성)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검토

- * (중소기업진흥공단) (현행) 기업평가 13등급 중 5등급 이상
→ (개선) 7등급 이상(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 경영위기·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 마련('17.6월)

☐ (출구전략 교육 강화) 창업성공패키지 등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교육과 함께 매각·M&A·도산·회생 등 사업 마무리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선

☐ (창업실패 사례 공유) 창업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실패사례 공유*를 활성화

- * 현행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진흥원)' 등을 공공·민간부문으로 확산

5 공공부문 고용 확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총 정원의 5%(지방공 기업은 5~8%)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 대상 확대*

- *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축소 : 「① 전문가 활용 업무, ②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외

☐ (공공기관 인턴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및 신규채용인원 중 인턴채용비중 반영 배점을 상향조정*

-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 확대 : ('16년) 0.5~1.3점 → ('17년) 0.9~1.7점

○ 채용형 인턴에 대한 최대 근무기간*을 연장(5→7개월)하여 고용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턴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

- * 채용형(70% 이상 정규직 전환) 2~7개월 체험형(직장체험 기회 제공) 1~5개월 범위 내 근무기간 설정

☐ (공공부문 신규채용) '17년 공공부문(공무원·공공기관 포함)에서 6.3만명*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7.2%(1분기 28.4%) 조기채용

- * 국가·지자체 4.3만명 + 공공기관 2만명

- * 공공부문 신규채용(만명) : ('13) 5.3 ('14) 5.8 ('15) 6.3 ('16) 6.2 ('17) 6.3(잠정)

참고 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밑줄: 주무부처)	추진 일정
1. 취업취약청년 지원		
1-1-1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우선 선발 권고	교육부	연중
1-1-2 청년취업아카데미 저소득층 30% 우선선발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개정)	고용부	'17.4월
1-1-3 K-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20% 우선선발 (K-Move스쿨 및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사업 공고문 개정)	고용부	'17.3월
1-1-4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자 DB를 활용해 장기실업자에게 고용촉진 프로그램 제공	고용부	연중
1-1-5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	고용부	'17.4월
1-1-6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학과 시범운영 및 확대,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	교육부, 고용부	'17.7월
1-1-7 고졸 미필 창업자 입대연기 요건 완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	병무청, 중기청, 미래부	'17.7월
1-1-8 취업맞춤특기병제 직업훈련과정 다양화	고용부, 병무청	연중
1-1-9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직업훈련 및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연계·제공	여가부, 중기청	'17.3월
1-1-10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여성 특화지원, 여성 맞춤지원에 대한 컨설팅·모니터링	여가부, 고용부	'17.7월
1-1-11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확대	여가부	'17.5월
1-1-12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 목표 25% 설정	국토부	'17.3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추진 일정
1-1-13 해외건설·플랜트 현장 연수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을 30% 우선선발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국토부	'17.3월
1-1-14 공공일자리에 청년장애인 30% 우선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침 및 선발기준표 변경)	복지부	'17.10월
1-2-1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상한 설정	금융위	'17.10월
1-2-2 민간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프로그램 마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7.6월
1-2-3 등록 후 휴학·졸업유예시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교육부	'17.6월
1-2-4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 생계비 지원	고용부	'17.3월
1-2-5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거치·상환기간 연장	금융위	'17.6월
1-2-6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취업알선 지원	금융위	'17.6월
1-2-7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비 한도 확대	금융위	'17.6월
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2-1-1 노동 기본권 관련 교육활동 확대 (교육·학습자료 개발)	교육부, 고용부	'17.4월
2-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주 인식 개선 (아르바이트 수첩 배포)	여가부	연중
2-1-3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구인·구직 포털과 공동캠페인 추진)	고용부	'17.4월
2-1-4 청년고용여건 열악한 주요업종 근로감독 강화 (상반기 4천개, 하반기 4천개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고용부	'17.3월 '17.7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추진 일정
2-1-5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선제감독 실시	고용부	연중
2-1-6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즉시부과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부	'17.4분기
2-1-7 상습 체불사업주 부가금 부과, 체불임금 지연 이자제도 확대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부	'17.4분기
2-1-8 최저임금 미준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16.6월))	고용부	연중
2-1-9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협약체결 확대, 지도감독 강화 (워크넷 등 공공/민간 청년취업포털에 표준협약서 등재)	고용부	'17.4월
2-1-10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관련법률 명확화 추진 (일학습병행지원법 제정안 발의('16.6월),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개정('17.4분기))	교육부, 고용부	'17.4분기
2-1-11 임금체불, 최저임금 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강화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부	'17.6월
2-1-12 정부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방안 마련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 낙찰제의 기준조정 등)	기재부	'17.6월
2-2-1 불공정한 채용행위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발의('16.8월))	고용부	연중
2-2-2 이력서에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사항 확인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 확산 및 제작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고용부	'17.8월
3.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3-1-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참여요건 현실화, 생산직과 고졸이하 근로자 참여 독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	고용부, 중기청	'17.3월
3-1-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후 내일채움공제 연계시 세제지원 추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5월), 세법개정(8월))	기재부, 중기청, 고용부	'17.5월 '17.8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추진 일정
3-1-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제도 개선, 추가적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	고용부, 기재부	'17.3월
3-1-4 산업단지 교통·주거 편의 제고	고용부	'17.4월
3-1-5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 확대	산업부, 산업인력공단	'17.4월
3-1-6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금융위	'17.6월
3-2-1 NCS 관련 정보 제공 및 제도개선·보완 추진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고용부	'17.6월
3-2-2 공공기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도입 (332개 공공기관 도입)	기재부, 고용부	'17.4분기
3-2-3 워크넷 개편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확대 구축)	고용부	'17.6월
3-2-4 사회맞춤형학과 실습 인프라 구축 지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관리운영규정 개정)	교육부	'17.4월
3-2-5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편의성 제고, 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강화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고용부	'17.6월
3-2-6 해외취업근로자 국내 취업지원	고용부	'17.9월
4. 창업 활성화		
4-1-1 창업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검증시스템 및 강사·멘토풀(pool) 마련	중기청	'17.3월
4-1-2 지방에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제공 (1차 모집(3월), 2차 모집(7월))	중기청	'17.3월 '17.7월
4-1-3 창업휴학제 가이드라인 안내·배포	교육부	'17.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추진 일정
4-1-4 창업자 글로벌 BI 시범 운영 (시행계획 수립(4월), 뉴욕·상해 운영(6월), 런던 운영(9월))	중기청	'17.4월
4-1-5 시니어·청년 매칭데이 운영 (플랫폼 구축 및 홍보(4월), 매칭데이 운영(7월))	중기청	'17.4월
4-1-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 완화 (중기간 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고시 개정)	중기청	'17.5월
4-1-7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1차 선정(4월), 2차 선정(7월))	중기청	'17.4월 '17.7월
4-1-8 전자상거래 창업자 지원	중기청	'17.5월
4-2-1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검토	중기청	'17.7월
4-2-2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 마련	중기청	'17.6월
4-2-3 창업 출구전략 교육 강화	중기청	'17.10월
4-2-4 창업실패 사례 공유 활성화	중기청	'17.6월
5. 공공부문 고용 확충		
5-1-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매뉴얼 제정)	기재부, 고용부, 행자부	'17.3월
5-1-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인턴채용비중 반영배점 상향,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 연장	기재부	연중
5-1-4 공공부문 신규채용	기재부, 행자부, 인사처 등	연중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권역별 가선정결과 발표

-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권역별 10개교, 총 50개교 가선정
-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권역별 7개교, 총 35개교 가선정
- 향후, 전국단위 선정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대학 확정

□ 추진경과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

- LINC+ 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 '17. 2. 24. (총 104개교 신청)
- LINC+ 사업 2단계 1차 서면평가 추진 : '17. 2. 28. ~ 3. 4.
- LINC+ 사업 2단계 1차 서면평가 결과발표 : '17. 3. 8. (총 78개교 선정)
- LINC+ 사업 2단계 정성평가(서면+대면) 진행 : '17. 3. 20. ~ 3. 24.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전문대 LINC+ 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 '17. 2. 28. (총 85개교 신청)
- 전문대 LINC+ 사업 정량평가 추진 : '17. 3. 14. ~ 3. 16.
- 전문대 LINC+ 사업(사회맞춤형) 정성평가(서면·대면) 진행 : '17. 3. 20 ~ 3.25.

□ 권역별 가(假)선정 대학 현황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

구 분	권역별 가(假)선정 대학명 (가나다 순)
수도권 (10개교)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산기대, 한양대(ERICA)
충청권 (10개교)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대전대, 선문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남 제주권 (10개교)	군산대,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대경강원권 (10개교)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한림대
동남권 (10개교)	경남대, 경상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부경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구 분	권역별 예비선정 대학명 (가나다 순)
수도권 (7개교)	동양미래대, 두원공과대, 부천대, 연성대, 오산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충청강원권 (7개교)	강동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백석문화대, 충북보건과학대, 한림성심대
대경권 (7개교)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안동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동남권 (7개교)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 동주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울산과학대, 한국승강기대
호남제주권 (7개교)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조선이공대

※ 향후, 대학별 부정비리 사항 추가 확인 및 공정성 검증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권역별 가(假)선정 결과는 변동 가능

□ 향후 추진 일정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

- 전국단위 정성평가(서면+대면) : '17. 4. 4. ~ 4. 7.
 - ※ 전국단위 평가 대상 10개교 중 최종 5개교 선정 예정
- 전국단위 선정 대학(5교) 발표 : '17.4.14(예정)
 - ※ 이의제기 접수 기간 7일(4.14 ~ 4.24) 후, 최종 선정 대학(총 55개교) 결정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전국단위 선정 정성(서면·대면)평가 : '17. 4. 4. ~ 4. 7.
 - ※ 전국단위 평가 대상 17개교 중 최종 9개교 선정 예정
- 전국단위 선정 대학(9교) 발표: '17.4.10(예정)
 - ※ 이의제기 접수 기간 7일(4.10 ~ 4.17) 후, 최종 선정 대학(총 44개교) 결정

기술창업 중심으로 대학이 변화한다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 추진
-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창업으로 연계하는 전주기 활동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대학 운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대학 창업을 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조기 육성·확산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은 공공 R&D를 통해 창출된 대학(연구실) 기술을 중심으로 대학 고유의 교육 기능과 연구 역량을 창업으로 연계함으로써,
 - 연구실이 바로 글로벌 창업의 현장이 됨과 동시에 대학 자체가 창업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간 교육과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학의 역할이 앞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대학의 기술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학사제도 개편, 창업문화 조성 등을 아우르는 완결형 창업 프로세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 이는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창업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 기술창업은 연구실 기술과 시장 요구 기술 사이의 간극이 크고

성과 창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접근이 쉽지 않지만, 최고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 기존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마인드 제고, 단발성 창업 활동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기술창업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대학은 공공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창업이 아이디어 창업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 그러나 혁신적 성과를 창출한 글로벌 벤처 기업*을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바, 기술창업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대학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 * 팰런티어(Palantir)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공동 창업한 기업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측시스템을 개발(미국 중앙정보국(CIA),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사용)하여 현재 기업가치가 약 24조원에 달함
- * 모빌아이(Mobileye)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촉망받는 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센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들이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최근 인텔(Intel)이 17조원에 인수

□ 이러한 방향에서,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에 시범 선정된 대학은 정부 지원과 함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대학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기반한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교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창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지원하고 예비 기술창업팀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 (창업탐색지원) 대학보유 우수 기술 분석, 기술분야별로 최적화된 창업과정 탐색 등

(창업특화분석) 기술의 시장 경쟁력 분석, 지식재산(IP)·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창업연계R&D) 시제품제작, 기술 업그레이드 R&D 등

(창업촉진활동) 기술·시장 맞춤형 멘토링, 실전교육, 판로개척 등

- 대학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 엑셀러레이터, 동문기업 등 대학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또한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의 협업* 하에 대학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병행할 계획으로,

- 대학은 기술창업 교과과정 또는 학위 과정 개설, 창업중심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창업에 대해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평가 제도 개선 등도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다.

* 링크플러스(LINC+) 등 사업의 재원을 창업중심 시범대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금번 시범사업 착수를 통해,

- 대학별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대학 스스로 창업 프로그램과 자체 재원 조달 등의 계획을 제안하면 이를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3개 내외 대학에 3~7억원 규모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공고는 '17. 3. 28일부터 4. 28일까지 실시하며, 공모 지원

에 필요한 상세 정보는 미래부(www.msip.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향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8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 올해 중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존 창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감으로써, '18년 이후부터는 정책 수혜자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 전주기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미래부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존의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이 교육과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주체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 “이번 시범사업과 본 사업 기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기술창업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립예술단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다

- 올림픽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과, 정동극장,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 13개 소속기관·국립예술단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와 3월 17일(금) 오후 1시, 평창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VIP 라운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이하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예술기관·단체의 뛰어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공연 지원, ▲개·폐회식 참여, ▲문화올림픽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 협약을 통해 개·폐회식, 올림픽 시설(메뉴) 문화체험존, 성화 봉송 등의 주요 행사에서 대한민국 예술의 정수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문체부 유동훈 제2차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극장장, 국립국악원 김해숙 원장, 정동극장 손상원 극장장, 국립극단 김윤철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오페라단 김학민 예술감독, 국립합창단 구천 예술감독,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예술감독, 서울예술단 이용진 이사장,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이원철 대표이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혜경 상임 부회장, 한국문화재단 이향수 이사장 직무대리 등 13개 기관의 단체장과 이희

범 평창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동훈 제2차관은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체육행사에서는 경기 시설, 참가 선수의 경기력, 대회 주체의 경기 운영 능력 등 체육행사 본연의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최국의 문화예술 자산과 관광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해 대회 종료 후에도 개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협약식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 차관은 업무협약식 종료 후,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리는 ‘봅슬레이/스켈레톤 월드컵’을 관람하고,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은 ‘여자 스켈레톤 플라워 경기’ 우승자에게 축하 꽃다발을 증정할 예정이다.

2017년도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 선정

- 지역 고유 생태 자원과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연계 프로그램 등 15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고유한 생태테마 자원을 핵심 관광콘텐츠로 하는 '2017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이하 생태관광)' 15건을 선정했다. '생태관광'은 생태테마 자원을 지역관광콘텐츠와 연계해 이야기로 만들고 전달(스토리텔링)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대전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 산책' 등 8건의 생태관광 사업, ▲파주 '울곡습지 꽃가람 놀이배 움터' 등 4건의 자생화(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하동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 등 3건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이다.

생태관광은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여행으로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 보전에 기여(자연 친화 관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공정여행)을 느끼게 해준다.

문체부는 이러한 생태관광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생태관광 10대 모델 육성'과 '한국 슬로시티 육성' 등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생태관광이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새롭게 발굴,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을 포함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시의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 산책'은 연간 관광객 120만 명이 찾는 대청호 오백리길 6개 구간 59km 가운데 4구간(대전 추동 일원)을 주요 기반으로 한다. 지역민들이 안내하고 관리하는 이곳에서는 ▲시인, 도예가 등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오백리길 탐방(투어), ▲대청호 담수로 터전을 잃은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채록과 옛 기억을 보듬는 이야기마당, ▲관광객들에게 청정 문화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알찬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과주시의 ‘울곡습지 꽃가람 놀이배움터’는 분단국가의 아픔이 서려 있는 비무장지대(DMZ)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생태·안보·역사 교육 등과 연계해 스토리텔링화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문화예술코스(헤이리예술마을, 출판도시)와 연계해 ▲지역 군 출신 생태해설사 운영, ▲민통선 일원 지역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꽃차의 고품질화, ▲학생 환경 친화 봉사활동 기회부여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군의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은 2012년에 개관한 ‘지리산생태과학관’(악양면 섬진강대로 위치)의 지역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지리산생태과학관’은 지역 생태해설사 양성과 지리산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매력도를 높이고 남부지역의 대표 생태체험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생태관광의 인지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생태 및 관광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개별 사업을 보완하고 지역관광콘텐츠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태관광 사업지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지역관광콘텐츠와 연계된 생태관광은 향후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국내 생태관광은 바쁜 일상에 찌든 도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역민에게도 활력을 줄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일 년 내내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연이 주는 낭만과 서정을 맘껏 느낄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광콘텐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분	시도	시군구	사업명(세부사업)	지자체 연락처
<생태테마관광 사업>				
1	부산	-	갈대바람 타고 삼락습지 미로여행 (생태체험프로그램, 역사 갈대미로 조성 등)	낙동강관리본부 051-310-6072
2	대전	-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작가,도예가와의 산책, 기억할래, 먼저보슈 등)	관광진흥과 042-270-3990
3	대구	달성	천년의 용기(龍氣)를 품는 달성 옥연지 (수상식물 확대조성, 에듀 투어 등)	관광과 053-668-2482
4	강원	양구	아름다운 분지, 편지봉 해안(亥安)에서 (해설사 양성, 상시체험시설 조성 등)	생태산림과 033-480-2530
5	충북	제천	향(香)수(水)가 깃든 측백숲으로 (향수 프로그램 운영, 체험장 조성 등)	관광레저과 043-641-6702
6	전북	정읍	솔숲 구절초와 함께하는 솔로투어 (스토리텔링 상품, 향기캡슐 설치 등)	농업정책과 063-539-6173
7	경북	문경	길 위의 역사, 고개생태문화와 함께 하는 옛길 (자생화길 조성, 해설사 양성 등)	새재관리사무소 054-550-8384
8	경북	울진	울진 금강송 힐링캠프 (에코힐링 시범사업 등)	문화관광과 054-789-6301
<자생화(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1	경기	파주	파주 울곡습지 꽃가람 놀이배움터 (해설프로그램, 자생화군락 운영 등)	관광과 031-940-4726
2	강원	춘천	꽃피던 산골, 고향의 꽃 체험여행! (가마골 자생화 스토리 개발 등)	관광정책과 033-250-3063
3	강원	정선	정선 천상(天上)의 도시락 (삼탄아트마인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관광과 033-560-2363
4	경남	남해	팔색조 노니는 화전(花田) (꽃차 만들기 교육, 해설사 양성 등)	미래전략사업단 055-860-3624
<문화콘텐츠 활용 관광콘텐츠화 사업>				
1	경기	남양주	다산 정약용 마을 한강제일경 인문여행 (다산이 들려주는 생태하루 등)	문화관광과 031-590-2472
2	충남	서천	근대문화유산 미곡창고와 6080 골목길 음식테마 관광(미곡창고 체험프로그램 등)	문화관광과 041-950-4226
3	경남	하동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 (섬진강 달밤기행, 맞춤 해설사 양성 등)	환경보호과 055-880-2566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전담조직 신설 -

《 주 요 내 용 》

- ◇ 한·중 FTA 여야정 합의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 구축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3월 30일 출범식 개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농어촌 상생금 운영 추진’
 - * (추진경과) 여야정합의(‘15.11.30.) →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통과(‘16.12월) → 시행(‘17.1월) → 법률 개정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 추진(‘17.1~3월)
 - * (관련법 현황)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상생기금 설치 근거·용도 등 규정,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생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재단 명칭 변경 및 재단 사업에 생기금 출연금 포함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 개요협력기금 운영본부’와 상생기금 관리·운영 업무 추가, ③ 조세특례제한법 : 세액공제 대상(10%)에 상’운영위원회’ 신설 등 실무준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
 - 일시/장소: ‘17.3.30.(목), 10:30~11:00 / 키콕스벤처센터(서울 구로구)
 - 주최/주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주요내용: 상생기금 소개, 축사 및 운영본부 현판식
 - 참석자: 정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국회, 협력재단, 운영위원 등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중심으로 상생협력기금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 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설치되어 3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지난 '15.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지난 '16.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17.1월부터 시행되었다.
-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을 통해 운영되며,
 - 이를 위해, 관련 법률 통과 직후부터 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위원회'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되어 왔다.
 -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이고,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농어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 상생기금 운영본부와 운영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협력재단 주관으로 오는 3.30일(목), 키콕스벤처센터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 출범식에는 정부, 국회, 협력재단, 운영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 정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 융합 표토환경관리 전략 세운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년 표토보전 국제 심포지엄’ 개최
- ◇ 한국, 미국, 프랑스 등 7개국 표토관리 전문가 11명 발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표토(表土)* 환경관리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국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3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7 표토보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표토: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겔흙(약 30cm 내외 깊이)

-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표토환경 관리방안에 대한 심포지엄과 전문가 정책토론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중국, 대만 등 7개 나라의 전문가 총 11명이 연사로 선다.
- 이민화 KAIST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환경’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환경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관리 혁신과 활용 사례 등을 발표한다.
- 프랑스의 도미니크 아루에(Dominique Arrouays) 국립농업연구원(INRA) 박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양 환경 측정’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계 토양지도 작성과 토양 내 탄소관리 문제에 대해 강연한다.
- 이 외에도 스위스·일본·대만·중국의 토양 전문가들이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기술 융합 표토 관련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표토자원전략연구단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표토 침식 조사평가 기술과 월별 침식량 예측이 가능한 한국형 표토침식 모델 등을 발표한다.

- 표토는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며, 30cm의 표토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재생속도가 느려 적극적인 침식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 환경부는 표토 침식예방을 위해 2013년 표토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표토 침식현황 조사와 유형별 표토 침식 방지 대책 마련, 한국에 특화된 표토 침식량 예측 모델 수립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4년부터 ‘표토자원전략연구단’을 발족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 표토 침식현황 조사에 실제로 적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표토환경관리 분야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표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CT 융합 표토환경관리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7년 표토보전 국제 심포지엄 개요 및 일정.

< 심포지엄 개요 >

1. 추진 목적

-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파악, 국제협력 추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표토분야 환경관리 전략·방안 마련
- 환경부의 표토보전종합계획(‘13~’17)에 따라 ‘14년 4월 표토자원 전략 연구단(SSORii Research Center)을 발족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중

2. 개요

- 행사명 : 『2017년 표토보전 국제심포지엄』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for Surface Soil Management)
- 주 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융합 표토환경관리 전략
- 일시/장소 : 2017. 3. 30(목)-31(금)/시청 플라자호텔(다이아몬드홀)
- 주최/주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표토자원전략연구단
- 후 원 : 환경부, 지하수토양환경학회, 토양비료학회
- 참석자 : 총 200여명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내외 전문가, 표토관리 관련 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국제 심포지엄 일정 >

시간	발표내용 및 제목	비고
09:00~10:15	등록 및 영상시청	
Part I. 오전 프로그램		
10:15~10:20	개회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사회자: 김성철 교수 (충남대학교, 대한민국)
10:20~10:25	축사(상하수도정책관)	
10:25~10:30	환영사(양재의 연구단장)	
10:30~11:00	4차 산업혁명과 환경산업	이민화 이사장 (KCERN, 대한민국)
11:00~11:15	표토: 생태계 서비스 및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	양재의 교수 (강원대학교, 대한민국)
11:15~11:45	기후에 따른 스마트 토양(표토) 관리 기술	Charles Rice (캔자스주립대학교, USA)
11:45~12:15	대용량 DB를 이용한 토양(표토) 상태 평가: 토양 유기 탄소에의 적용	Dominique Arrouays (국립농업연구소, 프랑스)
12:15~12:30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12:30~14:00	점심식사	다이아몬드 홀 (22층)
Part II. 오후 프로그램		
14:00~14:30	토양(표토) 침식: 지구 변화의 대규모 평가	Pasquale Borrelli (바젤대학교, 스위스)
14:30~14:50	한국형 표토침식 예측 모델 및 WEB-GIS기반 토양(표토)관리시스템 개발	박윤식 교수 (공주대학교, 대한민국)
14:50~15:20	대만의 스마트 표토 자원 조사, 모니터링, 관리 및 정화기술	Zeung-Sang CHEN (대만대학교, 대만)
15:20~15:40	휴 식	
15:40~16:10	토양(표토) 식생 피복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및 ICT기반 지면 관측 자료의 통합	Genya SAITO (도쿄공업대학교, 일본)
16:10~16:40	중국 토양(표토) 내 토양유기탄소의 시공간적 변동성에 대한 모델 시뮬레이션	Biao Huang (중국과학원, 중국)
16:40~17:00	광업(Mining industry)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적용	최요순 (부경대학교, 대한민국)
17:00~17:20	고해상도 항공 이미지 및 물리적 모형을 연계한 담수지 규모 토양(표토) 침식 시뮬레이션	이기하 (경북대학교, Korea)
17:20~17:50	질의 응답	사회자
17:50~18:00	장내정리 및 폐회 선언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이제는 **“빠른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로 주문해주세요!

-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배달대행사 사업주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30일(목) 경찰청, 배달앱사 및 배달대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주문의 증가와 함께 배달대행업의 성행으로 빠른배달 서비스가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 배달대행사 업체현황 및 이륜차 사고예방 활동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주 원인인 ‘시간내 배달제’ 근절방안과 안전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 정부에서는 경찰청등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들과 ‘이륜차 배달 안전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배달대행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17.3.31부터) 할 계획이다.
- * 지역 경찰청 및 프랜차이즈업체, 배달대행사 등과 연계한 캠페인(17.5~8월)
- ** ① 배달대행업의 산재보험 특고 가입특례 포함 ② 노무형태를 고려한 전속성 판단기준 보완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는 ‘요기요 안전배달 캠페인’을 실시하여 가맹음식점 배달종사자들에게 이륜차 부착용 반사표지와 안전배달 가이드북을 배포하였고,
- (주)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론 및 실습병행)을 제공하는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배달앱사 및 배달대행사 사업주들이 처음으로 모여 공감대 형성 및 공동이행 노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배달대행사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고, ‘시간내 배달제’ 근절을 위한 **프랜차이즈 대표기업 간담회**** 및 지역별 배달대행사 간담회 개최를 통해 배달종사자 안전배려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 배달종사자 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 실시, 개인별 과도한 콜 수신 제한 등(’17. 6월)
- ** 고용노동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안전보건공단, 한국배달음식업협회, (사)한국이륜차안전협회, 음식업 대표 프랜차이즈업체 13개사 등(’17. 4월)
- 아울러,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와 업계 뿐 아니라 국민들도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 고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배달앱사 및 배달대행사 사업주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 시: '17.3.30.(목), 15:00~17:00(120분)
- 장 소: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8층(대청마루)
- 참석자
 - 정부: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 경찰청[교통안전과]
 - 유관기관: 안전보건공단[서비스안전실], 근로복지공단[보험재정국]
 - 배달앱사: (주)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배달통], (주)메쉬코리아[부탁해]
 - 배달대행: (주)우아한 청년들[배민라이더스], (주)메쉬코리아[부릉], (주)바로고[바로고], ZC제트콜, 플라이앤컴퍼니(주)[푸드플라이], (주)허니비즈[평동], (주)나눔콜[나눔콜]

□ 간담회 내용

- 배달대행 업체별 운영실태 및 업체별 재해예방활동 추진방안 확인
- “시간제 배달제”등 빨리빨리 배달관행 근절당부와 개선방안 논의
-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업계의 교통안전캠페인 참여방안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담당
15:00~15:10 (10')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10~15:15 (5')	·인사말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15:15~15:20 (5')	·배달종사자 재해예방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사무관
15:20~15:30 (10')	·배달종사자 재해예방 및 산재적용 관련 계획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15:30~15:35 (5')	·이륜차 집중단속 추진계획	경찰청 교통안전과
15:35~16:55 (80')	·배달재해 예방을 위한 자유 토론	전체
16:55~17:0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전체

“여성가족부 진로직업 일일체험으로 꿈을 키워요!”

“여성가족부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체험을 계기로 제가 특별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2016년도 진로·직업체험의 날’ 참여청소년들이 멘토에게 보낸 감사편지 중)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 공무원’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29일(수) 2017년 제 1회 ‘여성가족부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개최한다.

○ ‘여성가족부 진로·직업 체험의 날’은 2015년 이래 3년째로, 올해는 작년보다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이 크게 확대돼 총 7차례 걸쳐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 여성가족부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15년 3회(90명) → ’16년 6회(158명) → ’17년 7회(200여명)

○ 올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체험에는 서울 장충중학교 1학년 학생 33명이 여성가족부(정부서울청사 내)를 방문해 공무원 멘토 6인과 함께 일일 직업체험의 시간을 가진다.

* 향후 추진일정 : 4.25(벌내중), 4.26(명덕여중), 5.11(고대부중), 5.26(한양중), 6.15(증평중), 9.27(홍대부중)

□ 올해는 시행 3년째를 맞아 체험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됐다.

○ ‘공직탐구생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여성가족부 체험

에 앞서 ▲공무원의 개념, ▲공직가치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등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꿈의 지도 만들기’ 시간을 새롭게 마련해 청소년이 장래에 대한 미래 설계도를 직접 작성해 보고, 공직을 통해 사회에 기여 가능한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 직업체험은 청소년 6~10명씩 한 조를 이뤄, 여성·가족·청소년·권익 등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영역별 담당 멘토와 함께 각 분야의 정책수립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해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공무원의 일상과 직업적 특성에 대해 현직 공무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다.

□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은 “여성가족부 진로·직업 체험의 날은 단순히 보고 듣는 형식의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꿈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하는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세부계획(안)

□ 2017년도 여성가족부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일정

회차	일자	학교
제1회	3월 29일	장충중학교
제2회	4월 25일	별내중학교
제3회	4월 26일	명덕여자중학교
제4회	5월 11일	고대부속중학교
제5회	5월 26일	한양중학교
제6회	6월 15일	증평중학교
제7회	9월 27일	홍대부속중학교

□ 2017년도 여성가족부 진로·직업체험의 날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개회식	9:00~9:25	2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장관 인사말씀
부처소개	9:25~10:10	45'	○ '공직탐구생활' - 공무원의 개념, 공직가치, 공무원이 되는 방법 등을 소개하여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여성가족부 조직 소개 ○ 여성가족부 부서 업무현장 라운딩
업무체험	10:10~10:40	30'	○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연수 및 멘토와의 대화 - 각 국별(여성/가족/청소년/권익) 업무 오리엔테이션
	10:40~11:20	40'	○ 정책기획 '여성, 가족, 청소년이 행복한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 정책 발표 및 공유 '여성가족부에 제안합니다!'
피드백및마무리	11:20~11:30	10'	○ '여성가족부가 알고 싶다'. o-x 퀴즈
	11:30~11:50	20'	○ '꿈의 지도 만들기' - 설문지, 참여 청소년의 미래 설계도 및 진로체험 활동 소감문을 자유롭게 작성 ○ 소감 발표 및 공유
	11:50~12:00	10'	○ 마무리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음주운전, 속도제한,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등 현장 특별 점검 실시

- 꽃구경, 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 또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세버스 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사망자수(명): 5,114('78) → 13,429('91) → 5,392('12) → 4,762('14) → 4,292('16)

* 봄철 전세버스사고: 3,606 (23.6%, '14) → 4,958 (30.0%, '15) → 4,853 (28.5%, '16)

○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운전자의 실천의지를 독려할 것이다.

* 비상망치·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내방송, 운행 전 운수종사자 건강상태·음주여부 등 확인,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 이용객도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지닌 시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 수산신기술 여기 모여라

- '2018년 수산 연구개발(R&D)사업' 수요조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립수산물과학원(원장 강준석)과 함께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3주 간 '수산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부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방안 마련, 미래양식기술 개발, 수산기자재 고도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기술 수요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주도하는 기초 연구인 '수산시험연구' 부문과 사업화를 원하는 기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산실용화 기술개발' 두 부문에 관해 이루어진다. 수요조사 분야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수산식품 개발, 어선 및 기자재 관련 기술개발 등 수산 관련 전 부문이다.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연구의 실효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과제가 선정되면 2018년 수산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초·응용 단계에 있는 기술 연구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실증·산업화 단계의 기술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지원하여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성과 이어달리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

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유용한 연구과제 및 기술들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발굴된 과제에 관해서는 수산분야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
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조사 공고문은 31일(목)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국립수산물과학원(www.nifs.go.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www.kimst.re.kr) 누리집에 게시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상중 선임연구원 ☎ 02-3460-4057
-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구기획과 ☎ 051-720-2822

1. 기술수요조사 목적

- 2018년도 수산분야 연구개발사업(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수산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수요 발굴
- 수산분야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발굴하고 R&D 지원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분야

기술 분야	내 용	연구개발단계
수산실용화 기술개발	▪ 신수산물비즈니스 동력창출 (수산양식, 자원관리 등) ▪ 수산기자재 고도화 (어구어법 등)	응용, 개발 (기업체 참여 필수)
수산시험연구	▪ 미래 양식 기술 개발 연구 ▪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 연구 ▪ 기후변화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연구 ▪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연구	기초, 응용 (국립수산과학원 수행)

3. 참여 대상 및 방법

- 참여대상
 - 대학, 연구소, 공단·공사·협회 등의 수산관련단체, 기업 등 수산분야 연구개발에 관심이 있는 자
 - 참여 방법
 - [붙임]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한 후, ①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mst.re.kr>) 우측하단의 [해양과학기술 수요조사]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②국립수산과학원이메일(nfrdiplanning@korea.kr)을 통해 제출
- ※ 기술수요조사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 2017. 3. 31.(금) ~ 2017. 4. 21.(금)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추진 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공고 및 접수	'17년 3월 ~ '17년 4월	○ 해수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및 KIMST 홈페이지 공고 및 관련기관으로 홍보협조 요청 ○ 온라인(KIMST 홈페이지, 국립수산물과학원 이메일)으로 접수
↓		
수요조사 기술아이템 검토 및 선정	'17년 4월 ~ '17년 9월	○ 사전검토: 기술분류 및 중복성 검토 ○ 전문가검토: 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 사전선정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후보과제 2배수 사전 선정 및 과제제안서 (RFP) 도출 - 수산시험연구: 국립수산물과학원 후보과제 사전 선정 ○ 선정위원회: 기술분야별 '18년 신규과제 선정 (수산연구협의회 공동검토)
↓		
사업 공모 및 추진	'17년 10월(11월)~	○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18년 사업 공모(11월),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등 - 수산시험연구: '18년 사업책임자 및 설계서 공모 (10월, 내부), 사업책임자 선정(12월, 내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기술수요조사는 해양 수산기술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별도의 결과발표는 없음

5. 결과 활용

- 제안된 기술수요조사서 검토결과, 우수기술은 2018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및 수산시험연구의 신규과제로 추진
- 수산 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기술개발 동향, 기술수요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전담조직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구성되어 30일(목) 첫 출범한다고 밝혔다.

상생기금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관련 법령*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월 첫 시행되었다. 기금 운영주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며, 재단 내에 사업과 재원을 관리하는 사무국인 ‘운영본부’ 및 각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관련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상생기금 운영본부와 운영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협력재단 주관으로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가진다. 출범식에는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 출범식 직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생기금 운영·관리규정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기금은 앞으로 교육·의료 등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

한 상품권 발행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17.3.30.(목), 10:30~11:00 / 키콕스벤처센터(서울 구로구)
- 주최/주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주요내용: 상생기금 소개, 축하 및 운영본부 현판식
- 참석자: 정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국회, 협력재단, 운영위원 등